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0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1 국방부에 인쇄 영역 침해 항의 ‘육군시진 화보’ 수주 경쟁에 무언의 압력이 투입돼 상거래 질서를 흐리고 있다.

인쇄문화시보 1957년 10월20일자에 보도된 이 기사는 국방부에 항의서를 제출한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입장장을 밝히고 있다. 시보에 따르면 육군시진 화보는 엄연히 공개 입찰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인쇄업체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받아 일부 기업에게 이권을 제공한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급 인쇄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를 계기로 크게 흔들렸다고 전했다. 당시 인쇄물 수주는 인쇄업 고유의 영역으로 일정한 매출액 규모가 제시됐어야 함은 물론 채택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시보는 또 당시 국방부에 제출된 이 항의문을 통해 시급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제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특수 기업체로 알려져 있는 대 한공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성토했다.

## 2 삼화인쇄(주) 입상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국제 카탈로그 전시회에서 삼화인쇄(주)가 출품한 카탈로그가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1965년 10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이 전시회에 대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하는

점을 부각하며 국내·외 우수 카탈로그의 향연이 됐다고 전했다. 또 우수 상품의 해외 시장에 대한 선전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국내 카탈로그 제조업체들의 판로 개척에 많은 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시보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의 카탈로그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술력을 배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한 출품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선진 외국 기술습득을 위해 국내 인쇄·출판 업체들이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전시회에는 국내 165개 생산업체의 5000여점을 비롯해 미국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1500여점이 출품됐다.

3 사진제판전문 한국광양사 설립

일본과의 합작을 통해 국내 사진 제판 기술이 선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71년 10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일본의 광양사와 한국의 태양당인쇄(주)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한 한국 광양사에 대해 당시 사진 제판 부문의 선진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던 미국과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보는 또 이 합작 회사에 대해 일본의 사진제판전문업체인 광양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국내 기술진들의 질적 향상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추진됐던 한국광양사는 태양당인쇄(주)가 51%의 지분을, 일본 광양사측이 49%의 지분을 통해 출자됐으며 총 투입 재원 규모는

50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시보는 영업 부문에 대해 기술은 광양사가 영업 부문은 태양당인쇄(주)가 관리하는 점을 부각하면서 “기술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진 제판 기술진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합작 건이 진행된 이유는 당시 국내 임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았고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보는 분석했다.

## 4 인쇄용어 통일

‘도무송이냐 톰슨이냐’.

1975년 10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가 인쇄 용어의 통일 부문을 다루면서 게재한 사설 제목이다. 시보는 사설 도입부문에서 인간이 독립적인 개체로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독창적인 두뇌와 말과 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단일 민족에 의해 국가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에 있다고 판단, 인쇄업종에서도 통일된 언어 사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보는 도무송 등 일어를 비롯해 영어도 각 기종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식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보는 히리꼬미, 사시까에, 무라도리, 마기도리 등 일본식 표현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 인쇄를 전공하는 미래 인쇄인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5 인쇄기술 통신 교육

1973년 10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인쇄기술 부문에서의 통신 교육을 비교적 의미 있게 다뤘다. 이 교육은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일본 인쇄기술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추진됐다. 시보는 특히 새로운 워크플로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점을 강조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인쇄물의 질적 향상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다 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시보는 기능공의 1 차 교육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능공들을 흡수하는 각 인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했다.

당시 300여명이 통신 교육에 대한 접수를 끝내고 교육을 이수했다. 우수한 성적을 낸 수강생들에게는 일본 인쇄협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해외 취업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졌다. 시보는 이에 대해 “통신 교육에 대한 마땅한 기회가 없어 각 인쇄 공정 단위별로 막대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업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문했다.

## 6 고려대장경 새김 판 발견

국내에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 첫 새김 판이 발견됐다.

1978년 10월 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외국에만 있을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깨고 초

주본이 발견된 것에 대해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쾌거라고 호평했다. 또 시대별 목록과 원본 판이 발견됨에 따라 고려시대의 인쇄·조판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천혜봉 성균관대학교 교수에 의해 발견된 이 새김 판은 총 59종 73권에 이르렀다.  
“국내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한 학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시보는 외세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고증 자료이며 학계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려 대장경은 1011년부터 작업에 착수해 1031년에 마무리됐다.

정부의 시책을 꼬집으며 탁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의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이렇게 되면 지방의 인쇄사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지는 격”이라는 광주 T 인쇄사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각 업력을 존중해 주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8 고전 서체 선보여

현대미디어시스템(대표 이진기)에 의해 고전 서체 15종이 개발, 인쇄·출판 시장에 모습을 보였다. 1996년 10월 20일자에 발행된 인쇄신문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시한 훈민정음체, 용비어천가체 등 고전 서체 15종에 대해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고 호평했다. 이 서체들은 독특한 조형미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역해석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된 것으로 개발비만 60억원이 투입됐다. 20여명의 전문 연구진들이 3년 동안 매달린 결과였다. 신문은 특히 15종의 서체에 대해 외국의 개발 기법을 도입해 단순히 변형한 방식이 아닌 컴퓨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치하였다. 또 전자 출판의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집 프로그램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방법으로 고전 서체의 현대어 1072자가 제작됐으며 무상으로 공급됐다.

〈장홍일 기자〉

## 7 일간지 분공장 설립

### ‘일간지 분공장에 인쇄계 긴장’

1991년 10월 24일자 인쇄신문은 한국일보를 필두로 조선·중앙일보에 이르는 종양 일간지들이 전국 동시 인쇄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분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성토했다. 신문은 특히 대구나 광주 등 지방에 분공장이 들어설 경우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앞세운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두 손을 들고 흔영할 일이지만 영세한 지방 인쇄업체는 이로 인해 부도 등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본사에서 편집한 신문을 지방으로 이관해 인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